

[종합·해설]

한미 FTA 오늘 상정…국회 전운 고조

한 ‘질서 유지권’ 발동…연내 처리 가속도

민주 “모든 수단 동원 상정 막아 내겠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18일 상임위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실력 대결 준비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7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이에 민주당은 외통위에 정세균, 신낙균 의원 대신 김우남, 김영록 의원을 보임시키는 등 ‘육탄 저지’도 불사할 태세를 갖췄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날 “박 위원장이 오늘 오전 직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밟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자작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외통위원들을 제외한 인사들에 대한 회의장 출입이 통제된다”며 “회의 도중 의 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동원해 퇴장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들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외교통상위 회의장 주변

에 국회 경위들이 전격 배치된 한편, 외통위 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앞서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상임위에 상정해 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봄으로 막겠다는 게 민주 회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며 “민주당은 미국의 제협상 요구에 대해 천천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협상을 거론하지도 않는데 왜 벌써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화진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당과 협조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과 보폭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일(18일) 상정을 막아 내겠다”고 일전 불사의 자세를 견지했다.

민주당은 특히 해외 출장 중인 신낙균 의원과 물리적 충돌에 직면 나서기 곤란한 정세균 대표 대신 김우남, 김영록 의원을 외통위에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국회 상임위 위원을 교체하는 것)하는 등 18일 벌어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18일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모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원회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선진당 김낙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유선호·김영록 의원. /연합뉴스

질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자유선진당은 주중 비준안 상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력저지를 하자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통위 간사인 박선영 의원은 “18일 일반 상정에는 반대하지만 몸으로 막지는 않고 전체회의에서 당당하게 반대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초조사가 미흡하고 최

소한 농수축산 단체의 등이나 신뢰를 받는 보완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비준해선 안 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최규성, 자유선진당 유근찬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런 의견을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쟁점법안 처리’ 속도 낸다

홍준표 “경제살리기 법안 등 조속 통과시켜야”

한나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 분류 작업 ▲상임위별 쟁점 법안 심의·처리 전략 수립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비한 명분 쌓기 등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 세출 부수법안, 사회개혁 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희태 대표는 “국회도 속도전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홍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생고통 해소,

민주 ‘국회 보이콧’ 투쟁 고삐

丁 대표, 상임위별 ‘실력저지조’ 구성…금속령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공처리 방침에 맞서 ‘국회 보이콧’ 투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상임위 불참에 이어 17일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보건복지기족위와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는 결국 항후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도 이를 감안, “어제부터 애당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박희태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듣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FTA 일방상정을 공언한 18일의 외교통상통일위가 여야간 임시국회 정면돌격들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실력저지에 만전을 기할 태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투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전열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임시국회 중 가급적 외유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가야할 경우에는 꼭 신고하고 다녀오라”며 “앞으로 지역구 갈 생각하지 말라”고 ‘금속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상연락망 기동시 바로 국회에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며 “힘을 다 합쳐 모자를 판에 빼지면 되겠느냐. 흘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곳곳 몸싸움…상임위 모두 파행

민주, 문방위 등 ‘실력 저지’ 물리적 충돌 빛어져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강행 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빛어졌다.

국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보건복지기족위,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충돌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에 계속 불참했으나 전날까지는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하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방위는 오전 10시 국정감사 보고서를 체택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 1시간 30분만에 산회했다.

고통길 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상임위를 소집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 갈 수 없다”고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 위원장의 회의

장 입장을 막은 데 이어 전체 회의장의 위원장석까지 점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왜 막느냐”며 맞서 양측간 충돌이 빛어졌다.

행안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권경석 소위위원장이 오후 법안소위 개최를 선포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컵이 깨지고 여야 의원간 마찰이 오가는 등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도 오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단독 심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점거, 정회를 선포됐다.

교과위 법안소위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시작했으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항의함에 따라 산회했고, 회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국토위 역시 민주당이 회의 개최를 반대함에 따라 다음 주 여야 간사간 협의 후 다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고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소방·경찰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확대를”

민주 이윤석 의원, 개정안 발의

경감까지로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했다.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방위와 경위 계급에서 근무 중인 2명7천여명의 소방관·경찰관에게 소방 경과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한다면 민생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은 경장·경사·경위에서

한나라 전남도당 직무대행 김기룡씨
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당원들간에 이견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지금까지 중앙당 사무부 총장 직할체제로 운영돼 왔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권리의 향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

포사모 광주·전남 발대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12.17. 국제사물관 광주대회를 사랑해주시는

다사포티즈 “포사모”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12.17. 광주대회 광주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2008.12.17. 광주대회 광주대회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라남도